

야로슬라블 포럼과 한·러 정상회담의 의미

김석환

(주성대 부총장·국제개발전략연구소장)

- I. 한·러 정상회담 개최의 이유
- II.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
- III. 한반도문제와 러시아의 존재감
- IV. 야로슬라블 포럼 추진의 의미

I. 한·러 정상회담 개최의 이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洞爺湖)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 그해 9월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에 이어 4번째다. 또 올 11월 한국에서 열릴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 때문에 불과 2달 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양국간 우호가 매우 강하거나 아니면 우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하는 상황에 양국이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러시아관 ‘정치 다보스 포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야로슬라블포럼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특별한 현안 합의보다는 회담 참석이 주목적으로 이루어져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1박 3일이라는 아주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이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및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야로슬라블 포럼의 기조연설자중 한명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설을 했다. 여기다 러시아의 대표적 기업인들인 올리가르흐들과도 회담을 갖고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짧은 체재기간이었지만 만날 인사들은 다 만났으며 토론할 주제들은 다 토론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앞서도 언급했듯 한·러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도 아니고 특별한 제안을 위한 회담의 성격이 아니다. 양국간 현안보다는 우호의 확인 혹은 ‘관계의 복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대통령의 방러 결정 과정에서도 한·러 관계의 복원 필요성이 강조됐고 이것이 대통령의 직접 방러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한·러 정상회담의 결과 크렘린과 청와대간에 한반도 문제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와 크렘린의 외교안보 관계자간의 수시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거나, 한국에 도입할 러시아산 가스의 도입형태가 오는 11월 G 20 정상회담 때까지 결정될 것이라거나,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제안들이 나왔거나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획기적인 것도 아니며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애시당초부터 비중있게 논의되거나 추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언론이나 러시아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양국 정상과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언급했고 또 제안도 있었지만 그러한 제안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러 관계의 관건은 앞으로 이러한 제안이나 언급들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진행될 것 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II.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

한·러 관계는 한·러 정상이 2008년 9월에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선언한 상태이며, 이제는 한·러 간에 과연 ‘전략적으로 협력할 관계’ 혹은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개별 사안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확인해 나가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러는 아직 상호간 ‘전략적 협력’이라는 단어의 한계에 대해 명확한 공통의 개념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개념이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의 범위를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부분, 조금 범위를 넓혀 중국 및 일본이 포함되는 동북아 부분, 아니면 한미간 세계전략 차원의 협력과 연관될 경우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양국이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상징어가 말 그대로 비중

있는 실제적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한국은 이정빈 외교장관 시절 미-러간 현안이었던 단거리 미사일협정(ABM) 관련 언급을 한-러 정상회담 문건에 포함시킨 후 그 파장으로 외교장관이 경질되는 사태를 겪은바 있다. 한-러 양자 간 정상회담의 파장이 한미 관계의 후폭풍에 의해 우리 장관의 경질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이처럼 ‘레토릭’으로 ‘유행처럼’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전략적 협력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필자는 지난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11차 한-러 포럼장에서 한-러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의미를 러시아는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주한 대사를 지낸 글렙 이바센초프는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서 지역,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이익이 공유되는 것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답하고 “예를 들어 러시아 우라늄이 동북아의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것, 이러한 것이 경제분야에 있어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과 세계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간 협력이 공동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자간의 관계는 밀접하며 그러한 관계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한-러 간에는 이러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험도 축적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분명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것일까?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이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크렘린과 청와대 간의 수시전략대화채널의 신설에 대해 제안 했다. 이러한 발언에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깊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고려의 깊이가 어디까지 였는지는 시간이 보여줄 것이지만 자칫 준비를 잘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새로운 청구서의 형태로 날아올 지도 모른다.

Ⅲ. 한반도문제와 러시아의 존재감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이외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 그중 하나는 시기의 미묘함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동북아의 주요한 행위자임을 입증하여

야 하는 시기에 러시아 땅에서 한반도 이슈의 한 당사자인 한국을 불러들여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북한 긴장 경색과 그 과정에서 비롯된 개성공단의 비정상적 운영상황, 천안함 사태라는 돌발상황에 의해 갑자기 격화된 남북간 긴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가 새로운 차원의 변화상황으로 돌입할 때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는 핵심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지도층 및 언론 보도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의 상황에서 부각된 한·미 대북·중의 프레임에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월말 김정일의 전격적인 중국방문과 김정은 후계자 동반설이 이러한 프레임에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새로운 차원의 후계체제로 접어들고 이러한 와중에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암묵적 구조가 한·미 대 북·중의 프레임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면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이미 우리는 북핵 1차 위기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를 배제한 채 형성된 4자회담체가 러시아의 격렬한 반발에 의해 끝내 좌초되고 결국 6자회담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한반도 문제의 질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배제된 러시아 측의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이 때문에 한동안 한·러 관계는 매우 심각한 냉각기를 거쳐야만 했다.

필자는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전문가들을 현지에서 광범위하게 인터뷰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형태의 질적인 변화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로만 있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즉 러시아는 그들도 한반도 문제의 한 당사자이며 특히 그것이 북한의 운명과 결부된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와 연관된 것이라면 더욱 더 자신들의 목소리와 전략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선 친남한 일변도 정책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러시아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만만치가 않게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한·러 포럼 연차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러시아 내에서는 새로운 질서변환기에 러시아가 친남한 일변도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

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의 남북 경색의 책임론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강도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필자는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변화는 러시아 없이는 안된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에 러시아는 자신들의 신호를 보낼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다. 국내 언론에서 그동안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지만 러시아는 메드테베프 정부 들어서서도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격변시킬 상황이나 외교적 레짐 구축의 모습이 보일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사건을 전후해 동북아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이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자신들의 의견을 투영시키면서 나름대로의 ‘러시아 옵션’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천안함 조사단 파견의 과정도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즉 중국에 집중된 관심이 안보리의 의사결정 구조와 천안함 조사단의 신뢰성에 대한 러시아측 조사단 결과물의 영향력 제고 등으로 인해 갑자기 흔들리면서 러시아 옵션을 키워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양국 정상간 통화와 그 관련 내용 브리핑에 대한 불일치에 의한 얼굴 붉힘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천안함 이슈를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 정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정에 대해 언급했고(비록 브리핑 자료 등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한 언급을 추가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를 앞두고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 제안이 나오기 직전에 러시아 땅에서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야로슬라블 포럼 추진의 의미

다시 포럼과 관련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그래야만 왜 러시아가 이번에 이대통령의 초청에 공을 들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야로슬라블 포럼의 대주제는 ‘현대국가-민주주의의 기준과 효용성의 범위’ (Соврем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тандарты д

емократии и критерии эффективности)다. 또한 이번 포럼의 주최는 크렘린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현대발전연구소’와 ‘공공계획연구소’ 그리고 야로슬라블 대학이다. 이중 현대발전연구소는 이사장이 메드베데프 대통령 본인이고 소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지는 대통령 고문 이고르 유르겐스가 맡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포럼 주최측은 일찍부터 이대통령을 이번 포럼의 주요 인사로 결정하고 초청했다는 후문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포럼의 주제에서도 보이듯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와의 상관성 문제를 가지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며 러시아의 정책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년 전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발전’, ‘민주주의 발전’, ‘경제 발전의 속도’ 등을 러시아의 현대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해내고 있다.

즉 현대화에 러시아의 모든 정치세력 및 사회의 주요 집단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현대화 정책에 반대되는 걸림돌들은 모두 제거하거나 개선해야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메드베데프의 이러한 현대화 논리는 사실 러시아 국내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이는 산업정책, 국가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개입, 시민사회의 형성 및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두 깊게 연계되어 있다. 자칫 잘못하면 푸틴이 대통령 집권 이후 추진해왔던 강한 러시아 정책과 올리가르흐들과의 타협정책에 대한 반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 각 부분별 기득권 세력과의 논리 투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주최측은 처음으로 러시아 야당인 ‘야블로코’당의 당수인 세르게이 미트로킨과 ‘정당한 이유’당의 당수인 레오니드 고즈만을 내세워 현 집권 세력의 기반인 권위주의 세력 및 현 러시아 정치의 막후 타협세력인 올리가르흐들에 대한 맹공을 퍼붓게 했다. 미트로킨은 심지어 회담 연설을 통해 “푸틴이 현재 올리가르흐 혁명을 준비 중이며 지금은 메드베데프가 반 올리가르흐 혁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에 대한 고문 역할을 하는 마이클 맥과울(Michael McFaul) 등 외국 참석자들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발언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대륙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이번 포럼의 대주제, ‘현대국가-민주주

의의 기준과 효용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러시아 포럼 주최측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목적과 부합하는 참석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방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청와대와 한국 언론 대부분은 천안함 사태로 다소 소원해진 한·러 관계를 복원하는 성과를 올렸고 시베리아 극동 개발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비자문제 등 한·러 경제협력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이는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틀에서 한국 대통령의 야로슬라블 포럼 참석의 의미와 야로슬라블 포럼에서 논의된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과 과장들과의 비교 등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에는 너무나도 편협하거나 국내용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은 주변 4강에 둘러싸여있다. 더군다나 이 4강 중 러시아는 과학기술 및 에너지, 군사·외교 부분에서 핵심 플레이어중 하나다.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대비해야한다.

(2010/09/13)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